

연구총서 2000-16

•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조 한 범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학술교류·협력은 남북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들의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민족간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술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이질화 해소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동서독의 학술교류

냉전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았던 동서독간의 학술교류는 1986년 문화협정의 체결 이후 공식적 차원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양독간의 문화협정체결로 인해 학술분야에서 연방과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인적교류가 확대되었으나 양독학자들의 관심과 학술교류의 잠재적 가능성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협정에 따라 양독간의 학술교류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동·서독 학자간의 대부분의 접촉은 연방내독성(BMB)으로부터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았다.

양독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단순한 접촉증대를 넘어 학술 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인정, 그리고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독의 경우 동독측의 학술수준을 저평가하고 있었으나, 학술교류를 통해 서독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가 동독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술교류에 대한 양독간의 입장차이를 나타내 서독은 상대적으로 문화협정상의 합의 사항 준수 등 학술교류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동독은 실리추구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선호하였다.

동서독간의 학술교류는 문화협정 체결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양독간의 학술교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과정은 그리 길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교류에 있어 서독정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서독의 경우 정부의 직접지원은 물론 기타 지원기구를 통해서도 양독간 학술교류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졌다.

#### **남북관계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냉전체제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1988년 남북교류 추진의지를 천명한 ‘7.7 특별선언’으로 남북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8년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으며,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증가하였다. 통일농구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선수단의 서울·평양 상호방문과 남북한 예술인들의 방문공연 성사 등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도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상징성이 큰 대형이벤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제3국 경우가 아닌 남북한 왕래형 직접 교류·협력이 증가하였는바, 남북한 주민들의 왕래를 수 반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를 사회문화분야의 문화예술 공연단이 차지하였다.

90년대 중반까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냉전체제하에서 교류·협력은 종속변수였으며,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왕래교류보다는 제3국에서의 주민접촉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류가 협력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민접촉에 그쳤다. 특히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남한주민의 방북에 비해 극히 미미했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대북포용정책이 구사된 1998년 이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활성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의 실리추구입장에 기인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도 활성화되었다. 방북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등 왕래성 교류·협력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남북 주민접촉 및 방북이 일반주민들에게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급증했으며, 과거와 달리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한층 진전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남북 학술 교류·협력**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중에서 학술분야가 주민접촉 성사 건수 및 인원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통일분야와 경제

분야 등 현실적 필요성이 큰 분야의 학술교류가 많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확보라는 북한의 전략과 관계가 있다. 북한은 경제분야의 학술교류를 경제난 해소와 해외로부터의 대북투자유치와 연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분야의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대외이미지 개선 등 실리추구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학술분야의 경우 남북한 왕래교류보다는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북한측은 이와 같이 제 3국에서 접촉을 선호하며, 특히 중국지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는 점차 정례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최측도 남북한이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분야의 경우 방북을 통한 교류·협력이 미미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술분야의 경우 대북지원성 교류·협력의 소지가 타 분야에 비해 작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북학술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향후 새로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인적접촉을 넘어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교류·협력이 정기적인 모임과 학술회의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남북 학술교류·협력의 질적 발전과 안정적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학술교류·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북한측에 기인한 바가 크나 부분적으로는 남한측이 남북한간의 학술교류·협력을 지속적 사업보다는 과시성·행사성으로 인식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도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방안

학술교류의 경우 이질화를 해소하는 구체적 수단의 마련에 적합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술교류는 남북한간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들의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남북 학술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주력해야 할 것은 그동안의 이룩된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고, 남북한간 인적교류의 확대에 주력해야 하며, 이후 남북한간의 역사, 언어분야 등에 걸쳐 형성된 이질화해소를 위한 본격적 학술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사회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매개할 수 있는 학술계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학술 교류·협력의 특성상 정부주도의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민간주도의 원칙하에 민간과 정부간의 효율적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성이 있는 민간 학계, 대학, 통일부와 교육부 등 유관정부기관이 협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협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정의 진전과 연계될 경우 남북 학술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분야에서 북한에 필요한 학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북 진출과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학술교류도 적극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차원에서 '남북학술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구성, 이를 남북학술교류 협력 추진주체간의 자율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학술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와 컨소시엄구성, 정보공유, 자율적 규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학술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의 의미를 감안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이용의 활성화와 아울러 각종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독일의 학술교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간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은 남북 학술교류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아울러 관련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학술교류의 본격화에 대비, 저작권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학술교류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학술분야의 교류·협력은 문화예술 및 체육교류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학술교류는 남북한간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들의 마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민족간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술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이질화 해소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목 차

I. 서론	1
II. 동서독의 학술교류	4
III. 남북관계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12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12
2.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	22
IV. 남북 학술 교류·협력	29
1. 부문별 학술교류	29
2. 남북 학술교류·협력의 평가	39
V.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방안	43
1. 학술교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	43
2. 민간학계와 정부의 협조체제 구축	45
3. 북한 개방 및 대북지원과 연계	46
4. 남북 학술 교류·협력 협의체의 구성	48
5. 학술교류·협력 재원의 확충	50
6. 관련제도 보완	52
VI. 결론	55
참고문헌	57

## I. 서론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의 접촉이나 경제적 동기를 주축으로 하는 경협외의 한계를 벗어나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회문화 공동체형성을 지향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평화적인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객관성을 생명력으로 하는 학술분야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핵심적 고리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1989년 이후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경제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대북포용정책실시 이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확대추세에 있다. 학술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사회문화분야에 있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져 접촉건수 및 인원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학술분야의 교류협력은 대북포용정책의 채택 이후 점차 정례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최측도 과거와 달리 남북한이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북포용정책 구사에 따라 학술교류는 내용이 한층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 학술분야의 협력사업 승인과 남북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 등이 성사된바 있으며, 1999년에는 남북한간의 컴퓨터용어 통일 사전이 마무리되는 등 학술교류의 구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이 구사된 1998년을 전후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학술교류를 비롯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 2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북을 통한 교류·협력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남북 주민접촉과 방북이 일반주민들에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자율적 토대형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사회의 재생산 메커니즘에 깊숙이 근거하고 있으므로 단기적 처방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역사 인식의 경우 각자의 정체성에 의해 상이하게 해석되어 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내면화되고 있으며, 남북한 스스로도 냉전문화라는 자폐의 벽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이질화에 대한 단선적 접근은 남북한간의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류나 체육교류를 통해 정서적 동질감을 확대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이질화를 해소하는 구체적 수단을 재생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술교류는 남북한간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들의 마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민족간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술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이질화 해소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급류를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이질감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이질화의 해소와 사회통합의 실현은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다. 이점에서 남북한 학술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남북 학술교류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인 교류협력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술 교류 발전방안 연구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각론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II. 동서독의 학술교류

문화협정 체결이전까지 동서독간의 학술교류는 냉전구조의 영향, 특히 동독정부의 대서독 제한정책에 기인,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동서독간의 학술교류는 양독간의 정치관계라는 학술교류 외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게됨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이전까지 양독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동독 정부의 제한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대학, 연구기관, 학회간의 공동협력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장벽설치 직후에는 양독간 학술교류는 양독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억제되었다. 또한 성사된 양독간의 학술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서독을 방문하여 학술교류에 참가한 동독인들은 대부분 공산당당원이거나 동독에 대한 충성심이 인정된 사람들로 제한되었다. 1963년 양독간의 화해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동독정부는 학자들간의 교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괴테사건과 라이프 니쯔 전집, 기타 상당수의 학술잡지가 공동으로 편찬되었으며, 1966년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양독 통합 총학장 회의가 Bonn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학자·연구자간의 교류·협력은 60년대 말부터 동독정부가 ‘전독일적’ 통합학술회의, 연구자들의 모임, 공동학술잡지 편찬 등을 전면 금지하면서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 걸친 동독정부의 분리정책에 따라, 분단이전 단일체제로 운영되던 과학·학술단체들은 동서독으로 분열되거나 독립적인 국제기관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어 1963년 셰익스피어협회가 동서독으로 분리되었으며, 1968년에는 에른스트-발라하협회가 분리되었다.<sup>1)</sup>

양독간의 학술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협정(Kulturaabkommen)과 과학기술협정(Das WTZ - Abkommen) 이후였다. 문화협정은 1986년 5월 양독간에 체결된 문화협력에 대한 협정으로 내독간 과학·기술 협력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1987년 9월 8일에는 과학·기술 협정을 체결하였다.<sup>2)</sup> 이에 따라 양독간의 학술 및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협정이전에도 1970년대부터 인적교류 형태의 교류가 비공식적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대체로 일방적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냉전체제에 기인한 양독간의 정치·이념적 차이 때문이었다. 특히 동독의 경우 서독과의 학술, 문화교류가 동독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에 동서독간의 문화교류협정체결에 미온적이었다. 동독정부는 양독간의 인적교류가 동독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따라서 동독정부는 사회주의 문화의 특성을 강조하여, 서독과의 교류를 다른 외국과의 교류와 동일시하는 공식입장을 취했다. 반면 서

---

1)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pp. 550~551.  
 2) 문화협정은 학술교류를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협정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문화협정 1조는 협력대상분야로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학술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협정 2조는 학술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사항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학자 및 전문가의 파견, 강연·연구·학업목적의 학자교환,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업목적의 젊은 학자의 교환, 문헌·강의자료, 전시자료·교수도구의 전시, 장학금의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은 일부중복에도 불구하고, 협력분야에서 상이성을 보였다. 중점분야의 차이외에도 과학기술협정의 협력대상은 주로 연구기관이었으나, 문화협정의 대상기관은 대학교중심이었다. 또한 문화협정에 의거한 학술교류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효율적 측면보다는 학술분야에서의 양독주민간의 접촉확대를 추구하는 보다 거시적 차원의 목표달성을 추구했다. 서독측 추진주체의 경우 문화협정은 연방내독관계성이 과학기술협정은 연방연구기술성이 주관했다. Press-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lletin, Nr.83/5 참조, 1987.9.10, Institut für Gesellschaft(IGW), IGW-Report, Heft 11(1987) 손기웅, “교류·협력차원에서 신동방정책 독일정책과 대북포용정책 개관,”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황병덕, 김학성, 박형중, 손기웅 (서울: 두리, 1999)에서 재인용.

독정부는 양독간의 체제와 국경을 초월하는 단일민족 차원의 '문화민족(Kulturnation)'의 개념을 설정, 양독간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적극적인 문화교류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독간의 입장차이에 따라서 1986년의 문화협정체결 이전까지 양독간 학술·문화교류는 비공식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1970년대 공연예술분야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호인적교류는 제한되었다. 이는 양독정부간의 입장차이 이외에 관련된 양독 인사들의 입장차이에도 기인했다. 또한 동서독 문화교류가 상업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양독간 문화교류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1980년대에 들어 서독정부는 문화교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동독과의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동독이 문화교류의 상업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로 문화협정 이후 상업적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가 증가하였다. 문화협정에 따라 학술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실제적인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sup>3)</sup>

양독간의 문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독간의 전반적인 학술교류가 확대되었다. 특히 동서독 대학간의 자매결연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6~87년에 서독의 자아르 브뤼켄대학과 동독의 칼마르크스 대학간에, 1988년에는 뮌헨대학과 칼마르크스대학, 아아헨공대와 드레스덴 공대, 슈트트가르트 대학과 칼 마르크스 대학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다.<sup>4)</sup> 이외에도 문화협정을 바탕으로 양독간의 학술교류는 계속 확대되었다. 학술회의 참여 등의 형태로 인적교류가 크게 확대되었으

3)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실태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82~84.

4) 손기웅, “교류·협력차원에서 신동방정책 독일정책과 대북포용정책 개관”,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황병덕, 김학성, 박형중, 손기웅, (서울: 두리, 1999), p. 62.



나 양독학자들의 관심과 학술교류의 잠재적 가능성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미치지 못했다. 연방차원의 교류이외에도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교류가 이루어 졌다. 양독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양독간의 교류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쟁전 계획된 일부사업들이 공동계획으로 다시 진행되기도 하였다. 특히 그림독일어 사전 편찬은 양독간의 대표적 학술영역의 활동이라는 점 이외에도 공동의 언어와 문화보전작업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문화협정에 따라 양독간의 학술교류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동·서독 학자간의 대부분의 접촉은 연방내독성(BMB)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받았다.<sup>5)</sup> 문화협정에 따라 연방내독성의 재정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지원분야는 ‘학술접촉을 위한 직접지원’, ‘양측의 합의에 따른 사업지원’, ‘독일 학술교류재단(DAAD)이 관장하는 대학생, 학자교환과 동독행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지원’ 등이었다.<sup>6)</sup>

우선 ‘학술접촉을 위한 직접지원’의 경우, 연방내독성에 따르면 1988년중 약 400명의 학자들이 동독여행시 지원을 받았으며, 약 250명의 동독학자들이 동독여행시 연방내독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7)</sup>

5) 연방내독성은 문화협정체결 수년전부터 양독간의 학술교류에 대한 재정·행정지원을 수행했다. 1985년 연방내독성 연감은 동독 학자들의 서독내 학술행사와 관련기관방문, 서독학자들의 동독내 학술행위와 관련기관 방문, 동독출신학자들의 서독지역 교수초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졌음을 밝히고 있다.

6)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1993. 참조

7) 지원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8건의 동독학술여행(교수, 대학생)에 대한 지원  
(동시에 동독학술 기관이 후원)
- 40건의 동독행 자료수집여행에 대한 지원
- 4명의 동독출신 초빙교수에 대한 지원

문화협정상 ‘양측의 합의에 따른 사업지원’분야의 경우 1988~89년도 동서독 사업계획으로 약 100개의 사업이 합의되었으며, 그 중 21개는 광의적 의미에서 학술프로젝트였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을 분담 수행하는 연구로부터 안내여행, 콜로키움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문화협정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동서독 학술 교류·협력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 중점을 두었다.<sup>8)</sup> 1988~89년도 1차 사업계획의 학술프로젝트에는 대부분 정교수가 참여했으며, 연방내독성의 방침은 개인의 권익을 실현시키는 기구화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화협정이전까지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은 연방내독성으로부터 직접지원을 받았으나 문화협정 이후 독일 학술교류재단(DAAD)이 이를 대신하였다. 문화협정에 의해 체결된 1차 2개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동·서독 학생 교환 및 신진학자의 교환은 독일 학술교류재단이 수행하도록 위임되었다. 따라서 1988년 여름부터 독일 학술교류재단은 대학생 및 학자교환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독일 학술교류재단이 접수한 문의건수는 1,400건이며, 신청건수는 308건이었다. 1998년에 독일 학술교류재단이 지원한 동서독간의 학술교류는 서독의 경우 29건, 동독의 경우 126건이었다. 서독의 경우 전공의 2/3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었으나, 동독의 경우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자연과학과 공학분야 출신이었다. 또한 동독의 경우 대학생 교환학생이 전무했으나, 서독측은 2/3가 대학생이었다. 또한 1989년 동독측에서 신청한 134명의 박사학위소지자중 63명이 교수이고, 소장학자는 29명에 그쳤다. 따라서 서독은 원래의 목적대로 대학생과 신진학자 중심이었으

8) 분야별로는 언어과학 6건, 법학·경제학·사회학 10건, 수학·자연과학 2건, 의학·수의학 1건, 공학 1건, 미술·음악·체육 1건이며, 농업·임업·식품과학분야는 없었다.

나, 동독은 기성학자중심으로 인적교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독간의 학술교류에 대한 지원은 문화협정이외에 과학·기술협정에 근거해서도 이루어 졌다.<sup>9)</sup> 과학·기술협정은 동서독 학자들의 27개 공동추진 프로젝트를 명기하고 있다.<sup>10)</sup> 서독의 연방과학기술성에는 에어랑에 부설 IGW연구소에 동서독 연락사무소(BzB)의 설치를 위촉하고, 27개 공동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한 지원업무의 수행임무를 부여했다. 동서독 연락사무소의 임무는 해당분야의 대동독 협력에 있어 연방과학기술성과의 협의하에 재정적·행정적·과학·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서독 연락사무소는 정보교환, 전문사절단교환, 공동사업계획의 실현을 위한 학자의 인적교류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동독의 학술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협력사업은 동독의 과학·기술 연구 잠재력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서독의 지원은 독일연구공동재단(DFG)에 의해서도 이루어 졌다. 문화협정 및 과학기술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독일연구공동재단은 동독과 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을 지원하였다. 이미 동구권 각국의 학술원과 학술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지원을 해오던 독일연구공동재단은 1988년 12월 동독학술원과 양측 학자들간의 상호협조적 학술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 지원에 나섰다. 독일연구공동

9)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1993. 참조

10) 27개 공동프로젝트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석탄분석 등, 2) 매연가스 처리 등, 3) 원자로 안전, 4) 핵물리학, 5) 도자기 연구, 6) 고에너지 실험, 7) 산화방지연구, 8) 표면처리, 9) 산업용 로봇, 10) 산업심리학, 11) 노동심리학, 12) 미생물학, 13) 면역체, 14) 생물공학, 15) 생물학 정보은행, 16) 바이오 테크놀로지, 17) 폐수처리, 18) 인니처리, 19) 토양 생산성증가, 20) 분자생물학, 21) 산림연구, 22) 암연구, 23) 전염병, 에이즈, 24) 주택건설, 25) 유적보전, 26) 연구수립계획 및 학술개발, 27) 특허자료.

재단은 공동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외에 학술정보와 출판물의 교환, 공동학술행사, 장·단기 체류를 위한 학자교환 등에도 지원을 했다. 독일연구공동재단이외에도 폴크스바겐 재단(VW-Stiftung)과 쾰러 재단(Koerber-Stiftung)을 통해서도 지원되었다. 1989년초 이후 폴크스바겐재단은 양독간의 학술교류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특히 동독연구기관과 대학과의 학술협력지원에 중점을 두고 양독간의 공동프로젝트와 양독이 관계되는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병행했다. 쾰러재단은 개인차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동서독간의 학술교환에 중점을 두었다. 쾰러재단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동독출신 장학생은 1988~1989년도에 5명이었으며, 1989~1990년도에도 5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양독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단순한 접촉증대를 넘어 학술 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인정, 그리고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독의 경우 동독측의 학술수준을 저평가하고 있었으나, 학술교류를 통해 서독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가 동독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독은 동독의 역사학과 독문학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군사기술적 문제가 없는 한 동독과의 자연과학분야에서의 학술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11)</sup> 전반적으로 학술교류에 대한 양독간의 입장차이가 있었으며, 서독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협정상의 합의사항 준수 등 학술교류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동독의 경우 실리추구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11) Manfred Ackermann, "Die Kulturbeziehungen seit Abschluss des Kulturabkommens", Maria Handcke-Hopp, 40 Jahre innerdeutsch Beziehungen(Berlin, 1989), pp. 141~152; Oskar Anweiler, "Innerdeutsch Beziehungen im Ber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Vergl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BRD/DDR(1990), pp. 671~675. 신동방정책과 대북 포용정책, p. 304. 재인용.

선호하였다.

동서독간의 학술교류는 문화협정 체결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독일통일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양독간의 학술교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과정은 그리 길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교류에 있어 서독정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서독의 경우 정부의 직접지원은 물론 기타 지원기구를 통해서도 양독간 학술교류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졌다.

### III. 남북관계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은 1990년대 후반부까지도 냉전체제의 영향하에서 사실상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간헐적으로 이어져온 교류·협력은 실질적 내용을 가지기보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며, 정치·안보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는 냉전체제의 고착화라는 상황하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의 문체제기 혹은 정치적인 선전의 장에 머물렀다. 따라서 남북한은 교류·협력의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체제경쟁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교류·협력을 사용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시기 북한은 통일전선전략차원에서 다양한 선전성 제안을 해왔다.<sup>12)</sup>

적십자 회담의 진전으로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60년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1970년대는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괘독트린」과 「닉슨독트린」의 천명으로 한반도 주변에는 유동적인 정세가 조성되었다.<sup>13)</sup> 또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미소 양극구도

---

12) 1957년 남북언론인 교류제의, 1958년의 제 17차 올림픽 대회를 위한 단일팀 구성제의, 1965년 인민배우 박영신의 남북공동 영화제작 및 연극경연대회제의, 그리고 1966년 북한 언어학자 홍기문의 기자교류제의와 조류학자 원홍구의 과학자교류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않은 채 '대남호소문'의 형식으로 제기되었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제의로 끝나고 말았다. 최대석, "남북한 문화교류활성화방안 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230.

에서 중공과 미·일의 접근에 따른 다극화체제로 변화했고, 월남전의 종전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변화는 남한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게 만들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남북대화가 추진되었다. 반면 북한측은 월남의 공산화에 자극 받았으며, 미국의 일련의 태도변화를 아시아에서의 후퇴로 간주하였다. 또한 남한내의 정치적 상황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남북대화를 통일전선전술에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1년 최두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가 남북간 가족찾기운동을 북한측에 제의했고, 북한측의 손성필 위원장이 화답함으로써 당해 8월부터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sup>14)</sup> 이에 따라 남북한적십자는 1977년까지 비교적 활발한 접촉을 가졌으며,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도 이루어 졌다. 그러나 북한 적십자는 1978년 3월 제 8차 본 회담을 위한 제 26차 실무회의를 무기 연기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끝으로 교류·협력을 중단하였고, 이후 1984년 남한 수재에 대한 북측의 지원제의 이전까지 실질적인 남북적십자간의 교류는 공백기를 맞이했다.<sup>15)</sup>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개설, 7.4남북공동성명 등 정치적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적십자간의 접촉은 의도했던 이산가족간의 만남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끝

13) 1969년의 콰독트린은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1970년의 닉슨독트린은 콰독트린의 전세계적인 적용으로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보해왔다.

14)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이와 같은 제의가 가능했던 것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통해 대북한 유화제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한간의 장벽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인도적인 방안들을 제의할 용의가 있으며, 개발과 건설을 통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15) 남북적십자간의 구체적인 접촉일지와 결과는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수첩』, 1994. 참조.

이 나고 말았다. 따라서 1970년대의 남북한 교류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서도 주민들간의 실질적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였다.

1980년대에도 남북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되지는 못하였으나,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LA올림픽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이 있었다. 또한 남북경제회담과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남북간의 대화장구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4년 수재물자 인도 인수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등이 성사되기도 했으나 이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못했다.

1988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기 시작했다.<sup>16)</sup> 또한 후속조치들로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되었고, 동년 3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의 방북과 이들의 실정법위반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행선고, 이에 따른 북한정부의 비난 등 일련의 과정은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민감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1990년 2월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5원칙」<sup>17)</sup>을

16) 7·7선언은 남북교류의 적극추진, 남북간의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공산권 자료의 일반개방과 월북 및 남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부분적인 해금조치를 취했으며, 남북교육당국회담 등이 제의되었다.

17) 「남북문화교류의5원칙」의 내용은 문화교류과정에서 분단이전의 민족전통문화를 우선 교류한다는 것,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방식의 지양,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경주 등이었다.



발표했으며,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sup>18)</sup>도 조성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은 법적인 근거를 갖게되었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sup>19)</sup> 따라서 1990년대는 제도화된 틀 내에서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남북관계 제도화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다. 1992년 5월에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년 9월에 「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3년 3월 인도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의 방북이 허용되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 수립되었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시까지 남북경협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남북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94년 10월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북경수로건설지원체제가 갖추어 졌으며, 1994년 11월에는 남북경협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1997년 6월에는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제정했다.

18)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지원, 촉진시키기 위해서 1990년 8월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양래 자금지원,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지원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1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이전까지 남북한 주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체계내에서 다루어 졌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교류협력의 승인권이 통일원으로 일원화되고, 순수한 목적의 남북교류협력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제도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 역시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고’<sup>20)</sup>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분야에서 민간분야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를 비롯 다양한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벌였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교류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과 잠수함사건이 발생했던 1994년과 1996년의 경우 남북한 주민접촉과 남한주민의 방북이 전년도에 비해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정부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접촉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sup>21)</sup> 따라서 1996년의 남북 교류·협력은 전년도에 비해 위축되었으며, 특히 방북은 28건으로 1995년 53건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6년 12월 북한은 북한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으며, 이를 남한정부가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sup>22)</sup> 따라서 이와 같은 분위기는 사회문화교류확대에 긍정적

20) 그러나 정부는 대북 접촉 및 교류에 관한 허용기준으로 ①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②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③교류사안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운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의 17조에 제시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왕래와 접촉이라는 뜻이며,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 p. 192.

21) 따라서 1996년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남북 교류·협력이 연기되었다. 96년 12월 부산에서 북한측 관계자의 참석하에 개최예정이던 ‘해운산업의 전자자료교환(EDI)에 관한 실무회의’가 97년으로 연기되었으며, 96년 11월 예정이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의 남북한간 관제협상 2차 실무접촉도 무기 연기되었다. 『중앙일보』, 1996.11.3.

22) 북한당국은 평양방송과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이 성명에서 “막심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1996년 9월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

으로 작용하여, 199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남한 주민의 방북도 증가했다.

1997년 증가추세를 보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8년 신 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의 실시는 현 단계에서 무리한 통일의 추구보다는 통일의 기초 형성에 주력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북포용정책은 목표를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3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는 대북포용정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남북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에 따라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98년 3월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sup>23)</sup>가 발표되었으며,

---

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측은 또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측들과 함께 힘쓸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긍정적 검토 용의를 시사했다. 『중앙일보』, 1996.12.29.

23)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민간단체 대북지원 참여 확대
  -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참여 허용
  - 대북지원 협의·모니터링 목적의 접촉 및 방북 허용
- \*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 완화

이 조치에 따라 이후 실시된 적십자의 대북지원에 「겨레사랑북녘동포 돕기범국민운동」 등 6개단체 6명이 구호물자 인도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3개 단체 5명이 대북지원 협의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등의 행사시 언론사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 협력사업이 승인되었다. 정부는 또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원칙」의 적용을 천명했으며, 구체적으로 98년 4월 남북경협 추진 여건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sup>24)</sup>를 취했다. 이에 따라 대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교류·협력활성화 정책의 결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98년 한해 금강산관광객 10,554명을 제외하고도 3,317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수치는 정부가 민간인의 방북을 승인한 1989년 이후 1997년까지의 총 방북인원 2,408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증가하였다.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도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 자선음악회·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
- 언론사·기업체의 모금행사 협찬 및 무기명기탁 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24)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북요건 구비시, 승인을 원칙: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및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접촉(20일→15일), 방북(30일→20일)
- 범위내에서 「포괄승인 품목」 확대,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경제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 협력사업의 투자규모제한 폐지,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1999년의 경우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전년도에 비해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통일농구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선수단의 서울·평양 상호방문과 남한 대중예술인들의 방북공연 성사, 그리고 통일농구대회와 방북공연의 중계방송 성사 등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농구대회를 통한 북한 관계자 및 선수단의 남한방문은 93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도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상징성이 큰 대형이벤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제3국 경우가 아닌 남북한 왕래형 직접 교류·협력이 증가하였는바, 남북한 주민들의 왕래를 수반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재개되었으며, 이중 상당수를 사회문화분야의 문화예술 공연단이 차지하였다. 특히 북한 청소년 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이 성사되는 등 왕래교류를 통한 이벤트성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sup>25)</sup> 2000년도 방북인원은 7,280명으로 1999년 5,599명에 비해 30%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된 현상으로 1989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방북인원 18,601명중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1898~2000) 방북인원이 16,196명으로 총 방북인원의 87.0%에 달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방북은 1999년 329명에서 2000년 674명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9년에서 2000년 9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 방북자전체의 1/3을 상회하는

25)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768명으로 전체 방문인원의 57.0%에 달하고 있다. 이중 사회문화분야의 방문인원은 39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706명으로 1999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1999년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위한 서울 방문단 62명의 10.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중 평양학생소년예술단(102명), 평양교예단(102명), 북한교향악단(132명) 등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남한 방문인원이 336명으로 이산가족분야의 287명, 남북회담의 83명보다 많았다.

수치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양적인 발전과 아울러 질적인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징성이 큰 남북왕래 성 교류·협력들이 성사되었으며, 특히 북한측 공연예술단 등 비교적 대규모 방문단의 서울방문공연이 성사되었다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6)

---

26) 2000년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대부분이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02명, 평양교예단 102명, 북한교향악단 132명 등이 서울을 방문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 9건 570명의 절대다수를 문화예술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표 1> 남북 인적교류 현황: 주민접촉 (1989.6.12 ~ 2000.11.30)  
(단위: 건/명)

연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사	비고
1989	36 (70)	21 (22)	15 (48)	-	-	-	
1990	235 (687)	206 (652)	29 (35)	-	-	62 (377)	
1991	753 (2,195)	685 (2,047)	41 (70)	-	-	266 (1,173)	
1992	801 (2,420)	744 (2,250)	72 (230)	-	-	238 (1,015)	27(78) 전년이월
1993	1,172 (2,220)	1,148 (2,182)	21 (36)	-	-	313 (707)	12(18) 전년이월
1994	1,338 (2,864)	1,261 (2,673)	28 (63)	-	-	237 (691)	15(20) 전년이월
1995	1,011 (2,769)	1,007 (2,703)	44 (108)	-	-	494 (1,222)	64(148) 전년이월
1996	729 (2,338)	692 (2,029)	53 (406)	-	-	465 (1,003)	24(106) 전년이월
1997	1,387 (2,969)	1,340 (2,850)	17 (38)	2 (4)	-	516 (1,191)	8(9) 전년이월
1998	4,628 (6,714)	4,567 (6,623)	13 (26)	10 (31)	-	856 (1,890)	36(86) 전년이월
1999	7,590 (9,198)	7,616 (8,890)	17 (61)	5 (320)	-	884 (1,698)	74(120) 전년이월
2000	2,757 (4,794)	2,729 (4,687)	22 (51)	7 (15)	25 (88)	1,630 (2,276)	26(47) 전년이월
계	22,437 (39,238)	22,016 (37,608)	372 (1,172)	24 (370)	25 (88)	5,961 (13,243)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11월호, 2000.

## 2.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

남북한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냉전체제가 유지되었을 때 교류·협력은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냉전체제에 의해 형성된 주변적인 조건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았다. 특히 정치적인 요인들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를 빌미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상호체제선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점은 그 동안 남북관계가 체제경쟁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용했으며 남한의 반공주의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경직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웠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체제가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될 때까지 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문화정책의 중심은 반공정책이었다. 이는 북한과 무력을 동반하는 적대적 긴장관계에 직면한 한국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북 교류·협력의 개방적 가능성도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제약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사회문화정책을 유지한 북한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사회문화영역자체가 체제의 유지와 순응적 사회주의인간형의 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문화의 영역은 사회통제와 사회주의문화의 타율적 전달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자율적인 사회문화요소들의 기능이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제한되었고, 왜곡되었



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제자들은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성사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류·협력의 형태도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문화 교류·협력 그 자체보다 정치적인 선전효과와 같은 외적인 목적을 보다 우선시한 측면이 강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사회문화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남북 당국이 교류·협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다.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간 교류·협력의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 입장과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류·협력사안들은 성사되기 어려웠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비정치적 학술분야와 인도적 성격이 강한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냉전체제에 종속됨으로써 주변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sup>27)</sup> 교류·협력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27) 전체적으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김일성의 사망 등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으며,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1994년 일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과 민예총이 북한민예총과 함께 서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은 김일성사망에 따라, 북한측이 이를 연기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한 1990년의 「제 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북한측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이 문제가 되었으며, 1992년 「노부모고향방문단」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인모의 송환과 포커스렌즈훈련이라는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셋째, 왕래교류보다는 제3국에서의 접촉이 많았다.<sup>28)</sup> 성사된 대부분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대부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제3국의 중개에 의하거나 교포들의 중개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주최하는 경우가 적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도 제 3국에서 개최되는 관련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국의 베이징과 조선족 교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연변지역에서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이 지역이 북한지역과 근접해있어 북한측의 참석이 용이하고, 긴밀한 북·중관계 등으로 북측인사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지역에 한국학 및 북한관련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고, 북한에 해박하거나 인적인 연고가 있는 조선족들이 중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까지 전체 남북한 주민접촉건수에서 방북 및 왕래교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넷째, 대부분의 교류가 협력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민접촉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91년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몇 건의 협력 사업을 제외하고는 97년말까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이 전무했다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류·협력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전된 내용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민접촉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남북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남한주민의 방북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특히 1993년의 2건(6명) 이후로는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1999년 12월 북한 농구선수단의 서울방문까지

28) 1995년 주민접촉건수는 494건이었으나 방북은 53건이었으나, 잠수함사건이 있는 1996년의 경우도 주민접촉 465건에 방북은 28건에 그쳤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북한측이 공세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측의 제의나 요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응하는 수동적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특징은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로 1997년 전반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8년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유지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상징화되는 남북한 교류협력도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북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비로소 실질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의 구사가 남북교류협력의 증가추세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경제상황악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북한은 남한의 교류·협력제의에 대해 실리추구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 내부 시민사회의 성장<sup>29)</sup>에 따른 교류·협력요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볼수 있다.<sup>30)</sup>

29)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8) 참조.

30) 통일관련 NGOs의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994년 경실련은 통일관련 민간단체 조사과정에서 대략 250개정도 단체를 찾아냈으나, 실제로 경실련의 조사에 응한 단체는 171개였다.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 1994), p. 5. 또한 1998년 12월 현재 천리안 민간단체 종합정보 민족통일분야에는 경실련 통일협회를 포함 총 112단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대북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이 증가추세에 놓였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관련 NGOs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2000년 5월 현재 통일부 허가 법인은 총 79개이다.

따라서 1990년 후반부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의 자세변화, 그리고 남한사회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시도증가 등에 기인, 과거와 구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전반적인 남북 교류확대추세와 더불어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 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1999년에는 민노총 대표단의 평양 친선축구대회, 현대 농구단과 북한 농구선수단의 평양과 서울 상호방문을 통한 통일농구 대회, 그리고 남한 대중가수들의 평양공연 등 과거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진전된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고, 2000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과 질에 있어서 확대추세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3국에서의 접촉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왕래를 통한 교류·협력추세로의 전환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한주민의 방북이 대폭 증가하였음은 물론 중단되었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문화·예술분야와 체육 분야에서의 공연과 시합 등 상징성이 큰 대형 교류·협력이 남북한 왕래형태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와 이산가족상봉의 증가로 제한된 주민들에게 허용되던 남북 주민접촉 및 방북이 일반주민들에게 확대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수시방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한 주민들의 관광목적상 방북이 무제한 가능해졌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넷째,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의 대부분이 199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포용정책의 구사와 이에 따른 지원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북한의 경우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 획득과 대외홍보 등 다목적 실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다섯째, 최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서해에서의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며, 금강산 관광객 역류사건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다.<sup>32)</sup>

그러나 이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자율적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는 아직 한반도가 냉전체제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보안법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분단 및 냉전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냉전구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한층 진전된 의미를 가지게

31) 예를 들어 민노총 대표단의 방북과 친선경기는 남북노동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이 대외홍보 및 선전을 의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민노총 대표단은 방북이후의 행적 등으로 남한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통일 농구대회의 경우 북한에게 막대한 실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2000년통일음악회'의 경우도 북한측에 대가가 지불됨과 아울러 CNN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등 북한측으로는 대외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32) 북한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사태 이후 남한 관계자 방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측은 99년 7월 방북 예정이던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박사의 방북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대표7인의 방북에 대해 방북 연기를 요청하면서 '일시 난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관계자들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관하는 여성대표 7인 방북에 대해서도 방북 일정을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현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동아일보』, 1999.7.20.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북한의 과거 태도와는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IV. 남북 학술 교류·협력

### 1. 부문별 학술교류

전체적으로 1989년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경제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확대추세에 있다. 이는 대북포용정책기조가 유지됨으로써 교류·협력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고, 민간분야의 북한주민접촉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89년 6월 이후 2000년 11월말까지 사회·문화부문의 남북간 주민접촉이 분야별로 성사된 건수는 교육·학술 170(2,002), 종교 129(976명), 문화·예술 129(865), 체육 74(585), 언론·출판 106(389), 과학·환경57(310)으로 집계되었다. 사회문화부문중에서도 학술 및 종교,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다른 분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양적인 증가세를 보인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9년 문화예술분야의 이벤트성 방북공연들이 성사되었고, 남북한 농구단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00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1989년에서 2000년 10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의 전체방북인원 1438명중 2000년 방북자가 616명에 달한다는 점은 최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추세를 입증해주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중에서 학술분야가 주민접촉 성사 건수 및 인원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통일분야와 경제분야 등 현실적 필요성이 큰 분야의 학술교류가 많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술교류·협력의

부문별 실태는 아래와 같다.

### 가. 통일분야

통일분야에서의 학술교류·협력은 초기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경우 대체로 국제문제 및 국제정치차원에서 동북아 관련국들과의 관계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축 및 통일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학술교류는 남북한과 주변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주최측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주최한 학술회의에 남북한의 학자들이 초청되는 형식이었다. 소련 과학아카데미에서 주최한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화·평화·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90.9.4~6, 소련 블라디보스톡), 조지아공대 전략연구소와 중국 세계관찰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안보회의’(91.3.23~25, 중국 북경), UN군축국 주최의 ‘92 상해 유엔군축회의’(92.8.17~19, 중국 상해), 말레이시아 국민전선 주최의 ‘제1차 동아시아 차세대 정치인 회의’(94.8.3~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동경, 영국 런던 등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들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학자들간의 학술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남북한의 관련 당사자들이 주최하는 형태의 학술교류들이 나타났으며, 점차 정례화, 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통일포럼과 북한사회정치학회는 95년 이후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sup>33)</sup>를 통해

33) 1995년 베이징에서 남북한과 해외의 한인학자들이 모여 시작된 통일회의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다는 점에서 학술교류 정례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주요 회의의제는 제1차 회의에서 7·4 공동성명의 3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제2차 회의부터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골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를 주제로 매년 정례적으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 9월에는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정리되어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sup>34)</sup> 이외에도 남북한이 주최한 학술회의는 남북 신뢰회복추진협의회와 북한민족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모임'(97.6.30.~7.1, 중국 베이징) 등이 있으며, 버클리대 한인학회 주최의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에서도 반복적인 학술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특히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97.9.13~17, 중국 북경)에는 250여명에 이르는 남북한 대학생(남한학생 167, 북한학생 85명)들이 참가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세미나는 99년에도 개최되었다.<sup>35)</sup> 1999년 7월에는 남북한의 학자 및 연변의 조선족 학자들의 참여하에 '새천년을 향한 조선족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변대학 창립50주년 기념학술회의가 열렸다.<sup>36)</sup>

---

인 화해 교류협력 평화체제문제 등을 다루어왔다. 제3차 회의 이후는 남북 협력의 실천방안으로 경제,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북한농업구조 개선, 금강산 관광 등 세부주제가 다루어졌다. 99년에 개최(99.10.26~27, 중국 베이징)된 5차회의에서는 경제위기(남한의 IMF사태 및 북한의 식량위기 등), 서해교전, 햇볕정책, 북한 핵미사일, 한 미 일 공조, 국가보안법과 조선로동당 규약 및 형법 개정문제 등이 남북관계에 있어 대부분의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34) 이 책은 30여명씩 5년간 총 150여명이 참가한 학술회의의 기초발제, 발표논문, 토론내용을 통합자료집으로 엮은 것이다. 백영철 편,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 35) 99년 7월 남북한 청년학생 2백3명(남측1백43,북측60)은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청년학생통일세미나를 열고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는 남측에서 세계평화청년연합-전국대학원리연구회 회원과 교수들이, 북측에서는 각 대학 학생들과 북한의 교수진 및 조선아시아태평양중앙위원회 지도원 등이 참석했다.
- 36) 통일연구원후원으로 연변대학민족문제연구원과 한국미래정책학회가 주최한 이 학술회의는 종합학술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어, 역사, 인문사회, 예술분과 등에서 다양한 학술교류가 이루어 졌다.

통일분야의 경우 양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말해주듯이 남북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징성이 큰 남북한 왕래교류 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교류·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 학자들의 객관적 논의를 통한 학술적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아울러 인적교류 활성화 등 질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경제분야

경제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90년대 초반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타 분야에 비해 교류·협력 성사건수가 많았다. 경제분야의 경우 학술교류주제는 '제3차 동북아 경제공동체국제심포지엄'(90.10.9~12, 중국 북경), '환동해 경제권 국제 심포지움'(91.11.22, 일본 오사카),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포럼'(92.8.25~28,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1세기 동북아 국제 학술회의'(95.7.18~21, 중국 심양),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학술회의'(96.5.8, 중국 심양), '니가타 동북아 경제회의'(98.2.17~19, 니가타), '제8차 동북아 경제포럼'(98.7.28~29, 일본 도토리) 등 남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 및 발전에 관한 경우가 많았다. 학술회의 개최장소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으며, 특히 중국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 졌다. 북한측은 경제분야의 학술교류를 외부 투자유치 및 홍보에 이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경영학 분야의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확대나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sup>37)</sup>

#### 다. 한국학 분야

한국학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일본, 중국의 관련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제3차 조선학 국제 학술토론회’(90.8.2~5, 오사카), ‘구주한국학회 제15차 학술회의’(91.3.22~26, 프랑스 듀르당) 등을 제외하고는 ‘고려학 소장학자 학술토론회’(91.7.29~31, 중국 연길시),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94.2.20~22, 중국 북경) 등 대부분 북경, 연변, 연길 등 중국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96년에는 코리아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96.8.19~20, 북경)가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원과 국제고려학회 아세아 분회 주최로 열려 관련학자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진바 있다. 동 회의에서는 ‘언어·문학·법학·철학·역사·경제·사회복지·지역개발’ 등 8개 분과에서 논문이 발표되었다.

#### 라. 역사학 분야

역사학의 경우도 북한지역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의 제3국교류가 주축을 이루었다. ‘고구려문화 국제 학술회의’(93.8.11~14, 중국 접안시) 및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97.7.20~21, 일본 동경)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원시·고대문명의 재검토 학술회의’(95.8.4~6, 일본 오사카) 등 고구려 및 고대사 관련학술회의,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발굴’(93.4.15~17, 연변대학)과 같은 유적 발굴 등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의 인접지역에서의 학술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 11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조선장학회’ 창립 100주년

37) 고정식, “남북한 경제·경영분야의 학술교류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2회 전국 학술대회 (2000.7.11) 참조.

을 기념하는 남북 고대사학자들의 합동 심포지엄이 열려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고고학 연구소, 역사연구소의 학자와 남한측의 역사학자들이 참석했다.

2000년 6월에는 서울대 출판부가 북한이 출간한 조선유적유물도감의 판권을 사들여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도록을 출판하였다. 조선유적유물도감은 북한이 문화예술부·문화보존총국·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동원해 1988년부터 96년까지 8년간 국가사업으로 편찬한 선사~조선에 이르는 문화재 도록(총 20권)으로 서울대 출판부는 이중 고구려·고려·민속편을 재편집, 1차분 5권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서울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중국 연변대 고적연구소가 북한의 저작권 기구인 조선출판물수입사와 출판 계약한 것을 서울대 출판부가 판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출간됐다. 국립대학 출판부가 북한서적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수입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sup>38)</sup>

남북한간의 역사학분야 학술교류·협력의 특징중 하나는 교류·협력 분야가 주로 고구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sup>39)</sup> 고대사의 경우 남북한 체제 및 정치적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류·협력이 비교적 수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변국 학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중국 등에 관련유적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38) 『경향신문』 2000.6.18

39) 한창균, “북한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최광식, “남북한 고대사학계의 학술교류’방안,” 조광, “남북한 역사학계의 학술교류,”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2회 전국 학술대회(2000.7.11) 참조.

### 마.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분야 남북한 학술교류·협력의 특징은 분야별로는 컴퓨터와 정보처리분야 등이 많고, 남북한측의 참가자의 수가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91 국제과학기술 학술대회'(91.8.19~24, 중국 연길)에는 남한측 87명과 북한측 45명이 참석했으며, 94년에 열린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94.8.5~10, 중국 연길)에도 남한측 24명, 북한측 25명 등 다수의 인원들이 참석했다. 북한측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다른 학술교류와 비해 다수의 관계자들을 참석시키고 있다. 특히 남한의 '국어정보학회'와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가 주최한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중국 연길)는 '94, '95, '96년에 걸쳐 해마다 열렸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학술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96년 8월에는 한글 컴퓨터 처리에 필수적인 기술적 차원의 공동안을 채택 합의문으로 발표했다.<sup>40)</sup> 또한 '99년에는 제4차 대회가 96년 3차 대회 이후 3년만에 재개되어 컴퓨터용어 통일 사전을 마무리, 연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짐으로써 학술교류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의를 나타냈다. 남북한 학술 공동 연구의 시금석으로 주목을 모았던 제4차 대회에서 남북한 학자들은 5년여를 끌어온 남북한 컴퓨터용어 통일 사전을 마무리, 연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간된 남북한 컴퓨터용어사전은 ISO(국제표준어기구)2382조항을 기본으로 남북한 학자가 합의한 컴퓨터 용어 표제어 2500여개와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중·일 3개국어로 색인을 마련했다. 초기의 경우 컴퓨터 관련용어의 사용에 있어 남북한간 이질화가 심했으나, 다년간의 협의 끝에 공공사전을 출간했다. 국어정보

40) 합의문 전문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산원이 발행한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서울: 한국전산원, 1997), pp. 155~161. 참조

학회측은 2000년에 연변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말 문자의 정보화 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 바. 언어분야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언어는 상이한 체제 및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이질화가 심화되어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학자들의 교류·협력에 있어 언어이질화의 해소가 중심적 주제가 되어왔다. 다른 학술교류와 마찬가지로 제3국의 관련 학술회의에서 주로 교류가 이루어져왔다. 서울대 이현복교수와 북한 혜산사범대 로길용교수는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 ‘남북한 언어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남북한간 최초의 언어공동연구를 수행했다. 1993년에는 국제고려학회주최로 남북한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학술회의’가 베이징(‘93.8.28~31)에서 열렸으며, 1995년에는 ‘KOREAN 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95.8.3~4)에서 남북학자들간에 한국어 언어규범에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국어사정위원회,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96.8.5~7, 장춘)에서는 향후 남북한이 맞춤법·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을 개정하더라도 현재의 차이를 확대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전반적으로 남북한간 언어분야 교류·협력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사. 대학차원의 교류

남북 대학간 교류로는 98년 성균관대학의 정범진총장이 방북하여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타 학술교류를 협의하였는 바('98.4.28~5.5), 이는 남북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이었다. 99년 11월에는 고려대 김정배 총장이 방북을 통해 고려대와 김일성종합대가 비정치분야의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하고, 북측 사회과학원측과 2000년 평양에서 단군학술교류모임 개최에 합의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 대학의 교류·협력 추진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하계세미나와 임시총회를 열고 '남북대학 학술교류 협력단'의 구성과 남북한 대학총장회의의 추진을 결의한바 있다.<sup>41)</sup>

북한대학과 자매결연, 북한지역의 대학 건립 계획의 수립 등 대학차원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북한 지역에 설립됐다가 분단으로 남쪽으로 학교를 옮긴 송실대와 삼육대는 평양 및 인근지역에 평양캠퍼스나 분교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세대학교도 통일대비 북한 캠퍼스개설 준비를 위한 '연세 북한 캠퍼스 베이스'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김일성대학을 파트너로 학술교류를 계획중이며, 언어·컴퓨터 표준화방안·과거사 공동발굴 및 연구·의학분야 등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대북접촉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98년 고려성균관대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성균관대는 공동학술회의 개최나 교수 및 학생교류 등 자매결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려성균관대 총장의 답방을 추진중이며, 한국외국어대는 평양

---

41) 「경향신문」 2000.6.30

외국어대를 대상으로 북한측에 학술교류협정서 초안을 보낸 상태이다.

2000년에 들어서 특히 총학생회·학과·동아리 등 학생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추진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2000년 6월에는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10여명이 북한 김일성 대학 방문 및 토론회 개최를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평양예술대학과 공동으로 남북한 공동작품전시회 개최를 추진했으며, 성신여대와 광운대 총학생회는 북한 대학 학생회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했다. 서강대와 동국대 신문사 등은 북한대학 등에 대한 방북취재를, 단국대 총학생회는 북한 대학생들에게 편지 보내는 운동과 단군릉 답사를 추진했다.

지방대학의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학술교류가 추진되었다. 전남대는 북한의 김책 공업종합대를 파트너로 학술교류를 추진했다.<sup>42)</sup>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은 2000년 9월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경남지역 10개 대학이 내년 3월까지 북측 10개 대학과 학술교류와 역사유적답사 등 남북 대학간 교류를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sup>43)</sup> 이들 대학들은 늦어도 2001년 3월까지의 남북 대학간 교류를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44)</sup>

42) 전남대는 2000년 5월 총학생회의 교류계획을 받아들여 남북간 화해와 학술교류 차원에서 학교측이 적극 지원키로 결정, 북한 대학과의 교류비용으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학생·교직원 등 20여명 규모의 학술 방북단을 파견하는 것을 추진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1991년 김책공대의 학생위원회와 서신교류 등을 통해 자매결연을 한바 있다.

43) 부산대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남북교류추진단을 발족하고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낸바 있다. 또 동아대는 북한 청진시를 중심으로 한 역사유적답사를 위해 청진 제1사범대학과 교류를 추진하고 경성대도 자주교류추진단을 구성, 북한 유아교육 현황과 악과 공동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청진제2사범대학과 교류를 추진했다.

44) 「연합통신 뉴스속보」 2000.9.25



대학차원의 교류는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향후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남북한은 2000년 9월 3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학술,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교수·대학생 등 학술분야의 상호 인적교류에 의견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학생들의 방북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와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학술교류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측의 제의를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sup>45)</sup> 특히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차원의 학술인사 상호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남북 학술교류·협력의 평가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힘입어 학술분야의 교류·협력도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북포용정책으로 외적 제약이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학술교류·협력의 성사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대북포용정책의 시행 첫해인 1998년도의 경우 과거와 같은 교류·협력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학술분야의 협력사업 및 자매결연사업 등이 성사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내용이 한층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sup>46)</sup>

45) 김대중 대통령도 공통성 회복 및 공동학술연구를 위한 학술교류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통신 뉴스속보』, 2000.8.17

46) 98년 『연변과학기술대학후원회』는 나진·선봉지역 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협력사업자 승인 받았는데, 이는 학술분야의 협력사업의 첫 사례였다. 또한 성균관대총장이 방북하여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타 학술교류를 협의하였는 바, 이는 남북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이었다.

전체적으로 학술분야의 경우 남북한 왕래교류<sup>47)</sup>보다는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북한측은 이와 같이 제3국에서 접촉을 선호하며, 중국지역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sup>48)</sup> 중국의 연변대, 요녕대, 길림대, 북경대 등에 소속된 연구소와 오사카 경제법과대, 국제고려학회 등이 남북한 접촉의 중개인 역할을 했다.

최근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는 점차 정례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최측도 남북한이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분야의 경우 방북을 통한 교류·협력이 미미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술분야의 경우 대북지원성 교류·협력의 소지가 타 분야에 비해 작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경제학 및 통일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많았으며, 이는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확보라는 북한의 전략과 관계가 있다. 북한은 경제분야의 학술교류를 경제난 해소와 해외로부터의 대북투자유치와 연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분야의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대외이미지 개선 등 실리추구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북학술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었으며, 따라서 향후 새로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

47) 학술분야의 남북한 왕래교류는 1991년 11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1992년 9월 '평양동북아 경제포럼', 1992년 9월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 세미나', 그리고 1993년 11월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1996), pp. 46~47. 참조.

48) 중국이 선호되는 이유는 연변지역 교포들이 과거 북한과의 관계 등으로 인적인 연줄을 확보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점등이 작용하여 북한측의 참가가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인적접촉을 넘어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교류·협력이 일회성차원을 넘어 정기적인 모임과 학술회의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북대치라는 근본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북한측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남북 학술교류의 정례화와 지속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다. 따라서 성사단계의 학술교류·협력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종적 준비상황에서도 일방적 통보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남북 학술교류·협력의 질적이 발전과 안정적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학술교류·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남한측이 남북한간의 학술교류·협력을 지속적 사업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과시성·행사성으로 인식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술교류·협력이 남북양래보다는 제3국에서 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추진이 후 북한지역 방문자의 수가 증가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북한지역에서의 공동 학술행사 등 가시적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동안의 남북한간의 대립관계를 고려했을 때 제3국 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은 현실적 차선택일수 있었다. 특히 가장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 졌던 중국지역의 경우 남북간의 접촉을 중개할 수 있는 중국학자와 조선족학자들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중국지역의 경우 조선족 학자들의 인맥과 교류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그러나 제3국에서의 주민접촉이라는

점에서 왕래교류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제약을 받았으며, 따라서 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제3국에서의 주민접촉이 주축을 이룸으로써 학술 교류·협력이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 행사로 치러지지 못했다. 많은 학술교류·협력이 국제 학술회의의 공동참가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가장 많은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던 중국지역의 경우도 제3의 학술기관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추세였다. 남북한간 학술관계자의 교류·협력이 주요 의제인 경우도 대부분 해당지역 제3기관의 중재에 의한 공동학술행사형태로 개최되었다. 해당 지역기관 및 지역인사의 인맥과 중립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남북한이 주체가 되지 못함으로써 학술교류·협력의 준비 및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했다. 특히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 교류·협력체제가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 학술 교류·협력에 있어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인 혹은 특정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북한간의 신뢰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은 이를 강화시킨 면이 있었다.<sup>49)</sup> 이와 같은 측면은 최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추세에서 민간분야의 과당경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9) 남한의 한국통일포럼과 북한의 사회정치학회간의 정기적인 학술교류·협력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도 남북한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해외학자의 존재였다. 백영철 편,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서울: 건국대출판부, 2000), p.14.

## V.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방안

### 1. 학술교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사회의 재생산 메커니즘에 깊숙이 근거하고 있으므로 단기적 처방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역사 인식의 경우 각자의 정체성에 의해 상이하게 해석되어 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내면화되고 있으며, 남북한 내부의 냉전문화로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이질화에 대한 단선적 접근은 남북한간의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류나 체육교류를 통해 정서적 동질감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학술교류의 경우 이질화를 해소하는 구체적 수단의 마련에 적합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술교류는 남북한간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들의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민족간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술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이질화 해소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학술적 전문성과 객관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 남북 학술교류·협력에 대한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 학술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주력해야 할 것은 그 동안의 이룩된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고, 남북한

간 인적교류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남북 학술교류가 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 양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3국에서의 간접주민접촉에 그쳤다. 따라서 그 동안 진행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정리화하고 이를 남북한간 직접교류형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학자, 교수, 학생의 남북왕래를 주축으로 하는 인적교류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경우 상징성이 크면서도 정치적 파급효과가 작은 분야에 있어 공동조사형태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조사, 보건·환경분야 등에 있어 남북공동 조사·연구 형태의 학술교류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남북 학술교류협력기반이 구축된 이후에는 학술분야에 있어 남북 이질화해소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역사, 언어분야 등에 걸쳐 형성된 이질화해소를 위한 본격적 학술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학술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남한사회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매개할 수 있는 학술계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동시에 학술분야가 남한사회내의 냉전 구조 해체에 대한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분단한국의 냉전문화와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화는 단기적 처방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남한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북정책구사의 최대 난제중의 하나는 국민적 합의기반조성이다. 현정부의 화해지향적 대북정책구사 과정에서도 분단문화와 냉전문화에 길들여진 여론은 상당한 압박요인이며, 정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계의 학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통일기반의 구축은 남한사회내부의 냉전문화해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민간학계와 정부의 협조체제 구축

남북 학술교류·협력에서 정부차원이나 국책연구기관간의 교류·협력은 민간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민간이 이를 따라가는 추이가 나타남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에 전반에 있어 정부의 입지가 크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의 남북회담에서 남북한 당국자차원에서 학술교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있었던 만큼, 학술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차원이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진행될 남북 학술 교류·협력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주도될 경우 정치적, 상징적 이벤트로서 활용되고 남북 학술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술분야는 역사분야 등과 같이 남북한 정권의 정통성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교류·협력이 정부주도의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과 정부간의 효율적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초 정부는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남북경제공동체’건설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국책연구소라는 학술기관을 활용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객관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남북경제공동체협의준비위원회』를 구성,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업발굴 및 대북협의 방안 마련’과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북측과 협의, 남북 경제공동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 성

과로 귀결되지는 않았으나 국책연구기관간의 학술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모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구조에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 협력구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민간 학술교류·협력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표성이 있는 민간 학계, 대학, 통일부와 교육부 등 유관정부기관이 협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협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학술교류·협력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발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북한 개방 및 대북지원과 연계

북한의 개방과정의 진전과 연계될 경우 남북 학술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시장체제로의 편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북한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이를 습득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시장경제 및 기술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남한의 관련학술계의 분야별 학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 대북한 경제 및 기술분야 등 시장체제수용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분야별로 북한에 필요한 학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북투자관련기업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학술지원차원에서 학술서적과 기타 교육기자재에 등 관련 자료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북 진출과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학술교류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이에 따른 대북 진출의 확대는 이와 관련된 학술 교류·협력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특히 최근 남북경협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관련 학술교류·협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에 합의된 개성공단의 경우 이미 남한의 학계에서는 공단 개발예정지에 대한 문화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현대그룹의 공동개발형태로 건설될 개성공단의 개발예정지는 이미 잘 알려진대로 고려의 도읍지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있는 곳이다. 이는 개성에 상당한 매장문화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성에 700만평에 달하는 공단의 건설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경제적 효용가치를 떠나 문화재보존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경주의 경우 도시전체가 문화유적보호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사전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공단개발의 위험성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공단조성에 앞서 공단개발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남북한 역사, 문화계의 공동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금강산 개발과 경의선철도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개발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자연보호차원의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남북한 공동의 학술교류·협력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 개발과 경의선철도의 경우 개발예정지가 가지는 자연보호차원의 의의가 크다는 점을 고려,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대북 투자 및 진출에 따른 개발시에도 이와 같은 남북한 공동학술조사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남북 학술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이후에도 활용이 가능한 북한지

역의 유용한 과학·기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체제의 급진적 해체와 전환과정이 주는 시사점중의 하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과학기술적, 학문적 성과 및 학자들이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커다란 국가적 손실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및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학술 및 기술분야의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학계에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요분야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학술교류를 통해 북한지역의 중요 학문분야를 선정, 북한측 학문과 과학기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 및 이를 위한 학술교류·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50)</sup>

#### 4. 남북 학술 교류·협력 협의체의 구성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정부 출범이후 민간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이는 과거 교류·협력 창구단일화원칙에서 벗어나 창구다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민간교류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는 학술교류·협력과 같이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화해협력시대의 창구다원화는 당연한 과정인 동시에 아직 남북 교류협력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

50) 특히 통일에 대비 사전적인 과학기술 통합대비체제구축이 필요하며, 독일의 과학기술통합이 주는 시사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병목 외,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과제와 대응』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참조.

확대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학술분야를 포함한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교류·협력주체들은 대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재정적으로도 영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류협력 기반구축이 미진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및 독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보에 대한 독점문제는 비단 정부에 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정보에 대해 배타적 내지는 폐쇄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민간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보에 대한 상호공급 또는 유통체계의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sup>51)</sup> 또한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일부의 과당경쟁과 과열은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실리추구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타율적 조정이 아니라 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구도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분야의 효율적 협의체구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학술분야의 경우에도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류·협력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계차원에서 ‘남북학술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남북학술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구성, 이를 남북학술교류 협력 추진 주체간의 자율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구성, 정보공유, 자율적 규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북한과 교류·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51) 민족통일연구원, “제1차 KINU-통일관련 민간단체 집중워크숍,” 1997년도 집중워크숍 결과보고서, 1997. p. 291.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협의회 관련 회의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82~83.

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보다 효율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학술분야의 협의체의 구성은 전체적 차원과 각 분야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학술계와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52)</sup>

남북 학술 교류·협력에 있어 시급한 것은 남북 학계 대표단의 상호방문이며, 점차 남북왕래형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일이다. 그러나 보다 진전된 학술교류의 본격추진을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한간의 학술교류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학술교류·협력 재원의 확충

학술 교류·협력은 현실적으로 영리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학술분야의 결과물들은 공공재의 특성을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또한 남북한 학술교류는 인적교류의 성격을 지니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술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의 의미를 감안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

---

52) 남한의 경우 학술원, 과학기술한림원, 사회과학연구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등의 협의체와 각 분과별 학회 등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우리와 달리 민간과 정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나 사회과학원 등이 남북 학술교류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중국 사회과학원과 공식적 학술교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의 경우, 북한 사회과학원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정기적인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산하에는 통일문제연구소,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등 각분야별 연구소가 있다.

력기금 이용의 활성화와 아울러 각종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독일의 학술교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양독간의 학술분야의 인적교류는 정부차원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주체들은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북협력기금은 대부분 남북한간의 경협에 국한되어 집행되어왔다.<sup>53)</sup> 따라서 사회문화분야 전반에 걸쳐 남북 협력기금 활용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며, 학술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서도 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을 다양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이외의 각종 기금 및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학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진흥재단의 기금의 활용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술진흥재단의 주력사업에 남북한 학술교류·협력분야를 추가하여 기금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공동학술 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술교류·협력관련 인적교류의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문화협정에 따라 정부가 ‘독일 학술교류재단

53) 대부분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과 경협에 관련되어 집행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99년까지 '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탑구성지원(1억 6천4백만원) 및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탑 구성지원(7억 8천6백만원)과 '92년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 사업 준비금」(5억 5천백만원), '98년 남북공동사진전경비(3천만원),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설치·운영비(천삼백만원) 등에 대해 약 15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중 민간분야의 주도로 사업이 신청되고 이에 대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은 '98년 한국사진학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남북 협력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어 집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 6월호, 2000.

(DAAD)<sup>54)</sup>이 관장하는 대학생, 학자교환과 동독행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을 지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술진흥재단 지원의 경우 기존 재단의 지원업무에 피해가 갈 경우 예산규모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이외의 각종 민간재단의 기금의 활용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모금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학술분야에도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부주도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나 기존 기금의 이용은 이용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경우 활용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적 권위를 가진 민간단체 협의체 등을 주체로 하고, 기금의 투명한 운용의 제도화를 전제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남북 학자, 대학생의 인적교류와 민간차원의 남북공동 학술프로젝트 등의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 관련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처럼 범설립취지와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sup>54)</sup>

## 6. 관련제도 보완

남북한 학술교류 관련 제도 개선과 남북한간의 학술교류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독간의 학술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협정(Kulturaabkommen)<sup>55)</sup>과 과학기술협정(Das WTZ -

54) 이 법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모금을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율적 모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민간단체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손질이 필요하다.

Abkommen) 이후였다. 문화협정에 따라 내독간 과학·기술 협력이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통해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본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sup>55)</sup>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이 천명된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 실천방안의 마련을 통해 학술교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실천방안의 경우 독일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분야에서 학술분야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은 남북 학술교류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아울러 관련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학술교류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저작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북 학술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측 소유의 저작권과 관련한 시비와 함께 그 동안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거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분야의 경우 남

55) 문화협정 1조는 협력대상분야로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학술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협정 2조는 학술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사항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학자 및 전문가의 파견, 강연·연구·학업목적의 학자 교환,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업목적의 젊은 학자의 교환, 문헌·강의자료·전시자료·교수도구의 전시, 장학금의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지침에 따라 내독간 학술교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졌다.

56) 남북한은 1992년 5월 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 위원회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측의 무단사용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sup>57)</sup> 따라서 남북 학술교류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57) 고려사와 발해사 및 이조실록 등 북한이 국가적 사업으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제작한 역사관련 학술자료들이 책자와 CD형태로 복제, 남한에 시판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리조실록'에 대한 판권문제의 경우 상징적 사례에 해당한다. '리조실록'은 북한 당국의 지원아래 북한 사회과학원이 54년부터 착수하여 90년말까지 국역을 완수 400권으로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남한의 한 출판사가 91년 이를 무단 복제해 시판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했다. 북한은 91년 10월 항의문을 발송하여 이에 대해 경고한바 있으며, 최근에도 남한측에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리조실록'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연구가 미진한 역사분야와 한의학, 민속 분야 등에서의 북한 저작물의 무단사용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0.10.27



## VI. 결 론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개선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험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 예술단과 교예단의 서울방문공연 등 상징성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사업도 성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북한의 변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일정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한적 차원에 머물렀던 남북한간의 학술 교류·협력을 위한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학술분야의 교류·협력은 문화예술 및 체육교류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학술교류는 남북한간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들의 마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민족간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술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이질화 해소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학술분야의 인적교류의 대폭확대를 위한 종합적 조치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학술교류를 제한했던 외적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학술교류·협력의 독자적 영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학술 교류·협력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민간 학계가 자율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학술교류·협력은 영리적 차원이 아닌 공공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확충·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학술 교류·협력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 교류·협력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와 학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문화분야의 특성상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학계의 자율적 교류·협력이 정착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 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2.
- 김병목 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대응』.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수첩』.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4.
- \_\_\_\_\_. 『사회문화공동위수첩』.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 백영철 편.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서울: 건국대출판부, 2000.
-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 1999.
-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서울: 통일부, 1999.
- 통일연구원. 『통일문제협의회 관련 회의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 \_\_\_\_\_.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1996.
-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동향 분석』. 서울: 한국전산원, 1997.
- 황병덕, 김학성, 박형중, 손기웅.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서울: 두리, 1999.

## 2. 논문

-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98년 하반기 정책집담회 주제 발표논문, 1998. 10. 13.
- 고정식. “남북한 경제·경영분야의 학술교류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2회 전국학술대회(2000.7.11)
- 이홍균. “시민사회와 비정부조직.” 김혁래 외.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향』. 서울: 경제정의실천연합, 1997.
- 조광. “남북한 역사학계의 학술교류.”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2회 전국 학술대회(2000.7.11)
- 조한범.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8.
- “남북한 청소년정보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1999.11.24.
- 최광식. “남북한 고대사학계의 학술교류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2회 전국 학술대회(2000.7.11)
-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한창균. “북한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2회 전국 학술대회(2000.7.11)

### 3. 기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협력기금법』

『연합통신』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